

# 축산국 직제 확대개편 필요하다



김남용  
(축산발전추진위 부위원장)  
한국농육우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림부의 축산국의 직제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액중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 중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1970년 농림수산업중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7.8%였던 것이 1995년에는 10.4%로 증가하였다. 농업조수입 대 축산업의 조수입도 1970년 5.6%였던 것이 1995년에는 24.9%로 증가하였다.

1995년도의 전체농가가 1,430천호인데 이 중에서 축산농가는 792천호로 55%에 이르고 있다. 또 국민 1인당 축산물의 소비량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더라도 1970년을 기준하여 육류 전체는 6.9%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7.1%, 돼지고기 7.2%, 닭고기 5.9%, 우유 14.6%의 증가를 보였다. 물론 가축두수의 증가도 축산물의 소비량에 비금가는 증가를 보여왔다.

가축두수의 증가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서 정부의 축산국내의 직제는 물론이고 외곽의 축산관련기구도 확대개편이되어 야합에도 정부의 축산관련기구는 계속 축소되어 축산인들의 요구에 반하여 왔다.

WTO의 출범으로 모든 축산물이 개방되고 있다. 우유와 유제품은 이미 완전 개방되었으며 닭고기, 돼지고기도 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축산업이 부분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강화를 외치고 있고 축산인들은 수입개방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여하가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좌우할만치 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어서 정부의 정책의 잘 잘못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존속 발전할 수도 있으며 또 도산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정부에 힘이 집결되어 있으면서도 이 힘을 행사하는 인적 조직적인 요건은 정부에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정책이 나온다고 하여도 완성된 정책이 되지 못하고 항시 결함이 내재하여 있는 정책이 되므로 정책이 자주 변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존속 발전시키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경쟁력을 판단조차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있다, 없다로 몇 해를 허송세월하였고, 현재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일관된 청사진조차 마련치 못하고 어떤 여건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을 하다가 시기를 상실하곤 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WTO 체제하에서도 존속 발전하자면 반드시 축산국의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금번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수산분야는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수산분야가 떨어져나간 부분을 축산분야로 메꾸어주었으면 한다. 농림부 직속기관으로 있던 천안군 소재 구 종축장이 현재는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로 축소되었는데 그 기구는 다시 종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원하여야 한다. 그 지역에서도 기구가 축소된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한다. 종축원장은 1급직이 부임하던 자리였는데 현재 부이사관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는 종축원의 폐쇄까지 거론한다고 한다. 지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까지 확대 해석하여 지방자치를 내세워 밀물작전을 한다고도 한다. 지역의 여론은 고사하고 WTO 체제하에서의 종축생산은 중요하다. 종축의 개량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축을 확보하고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또 수원에 소재하여 있는 축산기술연구소도 주위의 토지를 잠식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명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일년이 멀다고 개명을 하고 있으므로 축산인들과 축산기술연구소간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 축산인, 즉 양축인들과의 거리를 더 좁혀야 하는데 연구기관의 내용을 양축가들이 알고 또 그 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면 또 조직이 생소해지곤하여 양축가와와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양축가들이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한다.

농림부내의 축산국의 직제는 이미 확대개편되었어야 했다. 축산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청의 신설을 주장한 바도 있었으며, 상당히 깊숙히 추진되기까지 하다가 당시 농촌진흥청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외청 신설까지는 할 수는 없더라도 축산국을 격상하여 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실 밑에 국에 해당하는 2개의 심의관실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 밑에 과는 업무를 지장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증설하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산국의 직원이 67명이고 축산국직원 1명이 7만7천명의 농민을 담당토록 되어 있다. 일본은 축산국에 271명의 직원이 있으며 축산국직원 1명이 2만2천명의 농민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2,173명의 축산 행정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 1명이 2천6백명의 농민을 담당하고 있다.

WTO 체제하, 수입개방하에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존속시키고 발전시켜 축산물수요의 일부라도 감당코자 한다면 반드시 축산국의 직제를 확대개편하여야 한다.